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정책학 석·박사
제23회 행정고시, 감사원·재무부·대통령비서실 등 근무
성균관대 교수·국정전문대학원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청와대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성균관대 명예교수

대답

강정면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현 대표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를
향하여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기본적인 정책 기조나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또 야당 원내 의석 180여 석이라는 극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 야당과 청와대·행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주말마다 야당 지지 성향 국민의 대규모 반정부 장외집회와 야당 지지 성향 국민의 정권 지지 장외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미래와 국민통합,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치와 자유』는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국가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국정 운영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고 또 관련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경세가이자 학자인 박재완(67)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박재완 이사장은 종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국가 운영 전체를 기획하는 일을 했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으로 2차례 행정부처를 이끌었으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청와대·행정부·국회에서 국정 운영에 깊이 참여했다. 정관계를 물러난 후에는 성균관대에서 국정전문대학원장으로 후학들에게 국정에 관한 경륜과 지식을 나누어 왔다.

박 이사장으로부터 한국 사회 현실 진단과 분열된 국민의 통합에 관한 생각, 나아가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기보다 선진도상국”

강정면 박재완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시민들 중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박재완 재단 이름이 시사하듯이 우선 한반도, 곧 남북한의 원만한 통일을 지향합니다. 나아가 남한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의식과 관행 등등 측면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 반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진도상국’(advancing country)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당당한 선진문명국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관행과 의식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민간의 싱크 탱크(Think Tank)입니다.

한선재단은 정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서,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해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는 정책을 연구·교육·홍보하고 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중장기 전략과제와 정치권 등이 외면하는 근원적인 구조개혁 처방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편부당(不偏不黨)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정론(正論)이 중론(衆論)이 되도록 노력하며, 과격한 원리주의, 속 좁은 종족주의와 대중인기 영합주의를 경계합니다.

크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뼈대 즉 선진국으로 가는 ‘침로(針路)’의 바탕에는 이른바 ‘공동체 자유주의’(共同體 自由主義)가 있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설립하신 고 위공(爲公)² 박세일(朴世逸) 선생께서 확립하신 사상이니. 공동체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 개인의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박애,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 고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선진화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주주의와 선진화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현재 그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파 또는 좌파 지지 세력이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가를 점령하고 일부는 우파 성향 집회를, 또 일부는 좌파 성향 집회를 엽니다. 유튜브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집단을 이뤄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반목,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박재완 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반목, 질시, 대립, 갈등 이런 용어로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리더인 위정자들에게 있습니다만, 그들도 ‘표심’, ‘바닥 민심’에 편승해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니깐요.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1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혹은 ‘배나 비행기가 나아갈 방향’

2 위공(爲公)은 초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교수의 아호(雅號)다. 박세일 초대 이사장이 ‘예기(禮記)’에 나오는 “대도지행야(大道之行也),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문구에서 자신의 아호를 지었다고 한다. ‘천하는 공공을 위한 것’이란 뜻의 천하위공은,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孫文)이 스스로를 정책(警策)하러 삼은 좌우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양심과 도량이 없는 정치인부터, 영혼과 용기가 없는 관료, 법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지성인이 되지 못하고 지식인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 열정과 슬기가 없는 학자, 언론인, 성직자와 시민운동가, 편향되고 욕심 많은 노조와 직역단체, 그밖에 공민(公民)의식이 희박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며 선공후사(先公後私)보다 선사후공(先私後公)에 급급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까지 일말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독 우리는 ‘남 탓’과 ‘제도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너무 팽배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에 대해선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만연해 걱정입니다.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나도 이런 사회 병리라 할까 일탈 현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나’라도 바로잡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얘기라 뭣한데, 우리 아파트는 대단위 단지라 공중목욕탕을 운영합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아래와 같이 써 붙여 놔어요. “우리 단지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킵시다. 1. 수건은 1인당 한 장씩 씩시다. 2. 헤어드라이어는 두발 건조에만 사용합시다. 3. 스킨과 로션은 얼굴에만 바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샤워 부스에 쓰던 수건이나 개인용품을 방치하기도 하고, 사우나실에서 땀을 훔치거나 체조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죠.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지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의 온천을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머문 자리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긴요합니다. 나도 책임이 있고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강박증이랄까 그런 게 몸에 배어 지나치게 깔끔한 점도 있지요. 비행기 내릴 때 안전띠를 원래 처음 상태로 정돈하고 나가죠. 공중화장실에서 볼일 본 뒤에 화장지도 호텔처럼 끝을 삼각형으로 말아두고 나오죠. 그런 것까지는 안 배워도,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법례덕국(法禮德國) 문명국가 지향해야”

강정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야나 이념 지향에 따라 세대간, 빈부간, 노조와 비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법 혹은 묘안이 있을까요.

박재완 동서고금을 통틀어 분열과 갈등이 심화해 원심력이 커지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니 국력이 쓸데없이 소진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이 무너질 때 그랬고, 로마제국이나 중국의 왕조들이 쇠하던 때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신 시절처럼 일사불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트집 잡기나 생떼 부리기 등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텐데 역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법례덕국(法禮德國), 곧 ‘법치, 예치, 덕치’가 정착된 문명국가’로 봤는데,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뜻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남의 허물을 침소봉대하지 않고 감싸주기도 하고 또는 “거짓말이라는 건 알지만 필경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며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의 사무(四無)¹, 노르딕 국가의 안테의 불문율(Jante's Law)², 그리고 독일의 신사협정, 프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와 같은 의식과 관행이 정착되어야 문명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1 ‘논어’ 중 “자절사(子節四): 무의, 무필, 무고, 무아(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 그 풀이는 아래와 같음
“공자께서는 네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子絶四).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셨고(毋意), 틀림없이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으셨고(毋必), 고집하지 않으셨으며(毋固), 따라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으셨다(毋我).”
2 안테의 불문율(Jante's Law): 자기 자신을 특별하거나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주로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지역 등 북유럽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안테는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세가 1933년에 발표한 소설 『도망자, 그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서 건너다』(A Fugitive Crosses His Tracks)에 등장하는 가상의 덴마크 마을 이름으로, 이 마을은 ‘잘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곳이다. 이 마을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잘생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여기에는 10개 조의 규칙이 있다. 10개로 구성된 안테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②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③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④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⑥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⑦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⑧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⑨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⑩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그게 말이 돼요?”라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런 면도 있겠네요”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깊이 얘기를 밤새 하지 않은 다음에야 짧은 시간 얘기해서는 다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서로의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게임 이론에 티포탯(tit for tat)¹이라고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이지요. 여러 실험을 통해 상대가 하는 행동에 따라 대응하는 티포탯 전략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됐죠. 그런데 티포탯보다 더 나은 전략이 ‘티포2탯’(tit for two tat), ‘관대한 티포탯’(generous tit for tat)입니다. 티포2탯은 ‘저 사람이 한번 가혹하게 나오면 참아주고, 두 번 가혹하게 나오면 그때 응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관대한 티포탯’은 ‘재는 나한테 100 정도 가혹하게 했지만, 나는 20~30 정도만 응징한다’라는 전략이죠. 그런 전략이 반복되는 게임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성과가 뛰어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 ‘그래 나부터 좀 더 관대해지자’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가져선 안 됩니다.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수에게도 미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듯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를 핍박한다든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외눈박이 시각으로 재단하고 왜곡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법과 원칙, 과학과 상식에 따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에 묘안은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할 때 제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이끌어 달라”라고 칼럼을 썼죠. 그런 기조로 일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티포탯’(tit for tat) 전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한 대로 갚는 맞대응 전략을 말한다.

"너무 얇은 지식 생태계, 정책 실패로 귀결"

강정면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깔아놓고 그 전제에서 뭔가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토론해야 하는데, 사실 자체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박재완 우선 우리의 ‘지식 생태계’가 너무 얇습니다. 저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아주 깊이 천착한 게 아니라, 금방 생각나는 것,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다 싶으면 그냥 내치르는 것이지요. 등산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길로 가보자’ 하는 것처럼, 연구도 별로 얇은 채 강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종과세, 비정규직의 획일적 정규직 전환, 그리고 강사들을 위한 답시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가 ‘살아남은 사람 빼고는 대학 강사들이 전부 다 어려워졌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이웃 일본은 행동이 굼뜨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식이라 우리라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겠죠. 뻔한 걸 또 조사한다고 그러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는 정책이 많죠. 그걸 의식해 서둘러 대못을 박으려다 보니 허술하고 부실한 날림 정책이 넘치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진중하고 사려 깊게 분석해야 하는데, 너무 감성에 의존하고 정치공학에 따른 복선이 난무합니다. 자기 생각과 부합하는 정보와 사실만 취사선택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문을 품고 탐색하기보다는 “에이, 그건 아닐 거야”라는 이습우화의 ‘신 포도’ 이야기처럼 자기 합리화 경향이 짙죠.

더욱이 주자학의 유산 탓인지 실리보다는 명분, 각론보다 총론을 더 강조하는 경향까지 더해져, 도덕 지향의 탁상공론이 무성하고 실사구시의 경세방략(經世方略)은 빈약합니다. 지식 생태계가 취약하고 자료도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인수인계도 아주 부실하고. 선진국에선 인수인계를 정말 상세하게 하는데, 우리는 인수인계 대충 합니다. 그냥 ‘잘할 거야’라고 말하고, ‘나중에 모르면 물어

봐' 그런 식이에요. 근데 후임자는 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후임자도 머잖아 또 다른 자리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데이터베이스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사장되고 말죠.

“한국 정치는 군주제가 가미된 공화제... 공화주의 취약”

강정면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 내지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의 정치 리더십 내지 정치체제가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재완 그래도 우리는 나름 절차 민주주의를 이 정도까지 발전시켜 왔죠.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점수가 높잖아요. 인도가 민주주의를 오래 해왔지만, 우리는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를 네 번씩이나 하고, 지방자치 역사도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외형상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체제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87년 체제’가 나름 지향했던 가치의 일정 부분은 그래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네 가지이거든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그것입니다. 현 정부는 자유주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자유주의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체제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점은 공화주의입니다.

널리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헌법 제2조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 원리를 민주주의로 오해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화주의를 뜻하거든요. 공화주의의 반대는 군주제예요. 군주제에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고 대체로 세습되죠. 그 반대로 국민이 집합적으로 권력을 공유하는 게 공화제입니다. 공화주의에선 다수 국민이 권력을 가지니 그 방식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점도 적지 않아요. 권력 분립 등 여러 원칙이 있지만, 그 바탕엔 공화의 덕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화(共和)는 서로 잘 어울려서 승복, 인정, 존중, 배려, 대화, 타협하고 대화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네 가지이거든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그것입니다.
현 정부는 자유주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자유주의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체제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점은 공화주의입니다.



‘천하는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의 천하위공(天下爲公) 글씨를 가리키고 있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고 협력해서, 그런 덕목들을 갖춰 함께 다스려보자,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치체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실제 운영은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가까웠습니다.

여당 운영은 임기 초기엔 대통령이 주도하고, 임기 후반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이끌었죠. 야당도 대체로 차기 대권 주자 등 특정 인물이 주도해 운영했기에 어떻게 보면 군주제가 가미된 공화제라고 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서 권력의 집중이 심화했습니다.

“정치인은 혜안, 열정, 슬기, 도량 갖춰야”

강정면 국민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요.

박재완 일단 기본적으로 혜안(慧眼)이 있어야 하죠. 예컨대 전문 지식,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과 같은 시대정신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熱情)이랄까요. 특히 공(公)에 관한 열정이니까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슬기도 좀 있어야 해요, 엇갈리는 주장이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도량(度量)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반대편까지 넉넉하게 품는 도량도 필수 덕목입니다. 도량이 있어야 반대편과 소통하고 차이점도 공감할 수 있어요.

한선재단 초대 이사장 박세일 선생은 『지도자의 길』이라는 유작에서 지도자의 덕목 네 가지를¹ 강조하셨는데 그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혜안, 열정, 도량, 슬기 이렇게 4가지 덕목입니다. 물론 이런 덕목을 다 갖추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성을 무척 강조하죠. 대선 때에도 예전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 문제부터 최근 대선까지, 단골 이슈는 늘 도덕성이었습니다.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너무 도덕 지향성이 강하죠. 일본 철학자 오구라 기조는 “한국은 도덕 지향성 국가다. 사람들의 모든 언동을 도덕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라고 일갈했죠. 독일에서는 ‘정직한 인물 10위’ 여론조사 결과 그 안에 정치인이 6명이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 인물 속에 정치인이 잔뜩 들어 있지 싶습니다.

강정면 도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꼬투리를 잡다가 보니 그런 것일까요, 비도덕적 인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박재완 오구라 기조는 우리의 도덕 지향성이 강한 까닭을 성리학의 영향에서 찾습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도덕을 추구하지만 결코 도덕적이지 않으며, 실상 도덕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가 각자 도덕을 뽐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도덕을 공격하는, 도덕이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도덕 지향적 사회죠. 그렇지만 정작 공격하는 이도 반격하는 이도 그 누구에게도 도덕이 없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또 혜안, 도량, 슬기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덕성에 타격이 가면 다른 자질보다 파급효과가 커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자주 활용되지 않나 추정됩니다.

지도자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선 근대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지식인 집단이 큰 역할을 했죠. 그들의 자질 중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무사도가 큰 역할을 했고, 실용적인 전문지식과 국제 정세나 시대정신에 대한 혜안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강정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애국심이었을까요, 열정이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인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박재완 공인(公人) 정신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국무위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잖아요. 일본에선 각료들이 메이지유신 때 일왕에게 다짐한 ‘오조’(5개 조 어서문·御誓文)를 낭독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론과 공도정치라는 게 있고,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 정책을 버리자는 뜻의 경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근대 유학자 이토 진사이가 주창한 ‘천하 공공의 도’와 오규 시라이의 ‘안민정치’ 사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¹ 박세일 교수는 저서 『지도자의 길』에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愛民과 修己’, ‘비전과 方略’, ‘求賢과 善聽’, ‘後史와 回向’ 4가지를 강조했다.

“이제는 우리가 의원내각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강정면 지난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권력의 분립을 통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권력 집중은 불안하고 좋지 않은 추세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통용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방향을 택해야 할까요.

박재완 권력 분립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했지만, 이것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실행 모형을 만든 사람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Jr.)이지요.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며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도 준사법 작용을 하는 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요. 매디슨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공화정의 장점을 몰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금 못사는 나라와 잘사는 나라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느냐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야만 국가들은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수준이 좀 낙후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 중동 국가는 석유 자원 덕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긴 해도 문명국가라고 사실 여기지는 않지요.

앞서 '우리 정치체제가 실패했나'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런대로 발전했지만, 공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제는 우리가 의원내각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너무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허브 앤 스포크스'(hub and spokes) 전략을 채택했죠. 순발력 있고 발 빠르게, 국민민복과 백년대계를 당리당략보다 앞세우는 전제를 충족한다면 그래도 권력의 집중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사회도 다원화되었기에 권력의

집중보다는 적절한 분권을 통해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차이를 순화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아요. 정치인들도 체계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훈련을 안 받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의원내각제에선 수상 자리에 오르려면 상당한 훈련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에서도 재선, 3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서 역량에 관해 검증이 거쳐야 수상이 됩니다.

야당도 무책임한 주장을 못해요. '그림자 내각'을 운영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복지 지출을 3배로 늘리자'라고 할 수도 없고, 반값이니 무상이니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 얘기를 쏟아낼 수 없죠.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이니깐 극명한 대립이 이어지죠. 0.7%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초래하니까 선거에 목숨 걸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나서니까, 그것이 갈등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정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원내각제가, 진짜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한국 상황에서 그게 되겠느냐, 그래도 대통령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재완 TV 토론 등 공론을 활발하게 벌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공론이 너무 미흡합니다. 뭘 바꿀 때도 대충 공청회 한두 번 하고 말죠.

강정면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 자체와 정당,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가 좀 될 것 같습시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재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같은 문제죠. 국회의원들 국민이 싫어하는 것 다 알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보면 그런대로 괜찮게 일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오히려 교수나 관료 출신보다 나은 사람도 많아요.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 생각보다 일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앞으로 좀 더 키워야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체계적으로 청년 정치인부터 키워야 합니다. 독일엔 정당마다 싱크 탱크인 재단이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정당 부설 연구원이 있는데, 아직 취약하고 당원 연수 기능도 부실합니다. 여당은 차떼기 사건 때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한 뒤에 연수원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공천 시스템도 중요하죠. 차츰 상향식 공천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면,

뜻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지방에서부터 시작해 하방 활동부터 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은 비례대표로 진입하더라도 나중에 지도자가 되려면 밑바닥을 알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성장해야 하죠.

정부에도 장관관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선 의원은 국장이나 1급으로 들어가서 배워야죠.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대개 그렇게 하잖아요. 초선들은 국장이나 과장으로 들어가고, 재선되면 1급으로 올라가고 3선 되면 차관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역량도 검증받게 되죠.

강정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재완 그렇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호혜적 이타성’을 갖춰야”

강정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치로 한반도 통일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 교육 홍보한다고 하셨는데요. 공동체 자유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재완 박세일 선생께서 만드셨습니다. 공동체가 수식어이고, 자유주의가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는 필요조건이고 공동체주의는 충분조건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할까, 공동체를 염두에 두지 않죠. 자유주의는 단순한 권리에 그치지 않고 책임과 의무까지 따릅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배려를 전제로 합니다.

또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와 다릅니다. 집단주의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주 필요 최소한으로만 제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아주 자유분방한 개인주의보다는 자유주의, 개인을 얹어매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의 두 개를 결합하면서도 무게 중심은 자유주의에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슷한 것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장경제는 영미의 자유주의와는 결이 좀 다르지요. 시장경제가 지닌 자율규제의 힘을 신봉하면서도 그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제한적·간접적인 정부 개입은 용인합니다. 경제가 건강한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시장원리와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을 동

원해 ‘경쟁적 질서’ 또는 ‘인간적 사회질서’(civitas humana)를 확립하자고 하죠. 질서자유주의는 공정을 강조해요. 우리 국민도 아마 어디 못지않게 공정에 대해 최우선 가치를 부여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이 다 도입한 기여입학제도 아직 도입 못하고 있고, 아예 그 말 자체를 못 꺼내죠. 심지어 주요 국제공항 중에 출국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없는 나라도 우리가 거의 유일하죠. 패스트 트랙은 추가로 100불 정도 요금을 내면 출국 심사와 화물 처리를 따로 빨리 거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돈 따로 낸 사람만 빨리 수속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창구를 추가로 운영하니까 일반 승객들도 절차가 빨라져요. 그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느냐’라는 불만이 두려워 아직도 도입을 못하고 있죠.

이처럼 공정을 중시하기에 그냥 자유주의만 강조해서는 착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실제 자유주의만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발 빠르게 대응해 뒤늦게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흡혈박쥐 무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쥐는 날개 달린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중에서 쥐가 가장 번성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번성한 게 박쥐로 900여 종이나 된답니다. 야행성인 흡혈박쥐는 피를 빨아먹는데 먹이 활동을 나가서 운 좋은 박쥐는 포식하지만, 운이 나쁜 박쥐는 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태학자가 관찰하니 운 좋은 녀석은 자기 정량보다 더, 120%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굴로 귀소(歸巢)해 배불리 먹은 박쥐가 굶은 박쥐나 임신한 박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은 피를 굶은 박쥐에게 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날은 또 서로 역할이 뒤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운 좋았던 놈이 굶을 수도 있고. 이걸 ‘호혜적 이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애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정확히는 몰라도 추정컨대 그런 이타성이 각 개체와 공동체의 융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봅니다.

유익할 점은 먹이 활동에는 아무런 규제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역량과 지혜, 노하우에 따라 어디 가면 예컨대 돼지 농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결과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 흡혈박쥐는 자발적으로 굶은 박쥐를 찾아다니며 약자를 보호하는 관행이 확립됐죠. 그게 어쩌면 공동



최근 '국가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문제를 다룬 박재완 이사장의 포럼 발제문.

체 자유주의가 작동하는 전범일지도 모릅니다. 활동에 제약을 두면, 예컨대 처음부터 흡혈박쥐에게 “너는 조금만 먹고 친구에게 양보해. 너 애 꼭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치도록 해”라고 하면,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강정면 공동체에서도 흡혈박쥐처럼 호혜적 이타성이 작동하려면 어떤 원리나 뭔가 동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규율을 해야 할지.

박재완 흡혈박쥐에겐 일종의 DNA가 각인되어 있겠지요. 사람과 다른 동물은 차이가 있다고 하죠. 사람은 혈연관계가 없는 동료라도 불쌍하면 도와주죠. 일부 포유류 중에서 코끼리라든지 버팔로 등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하지요. 애덤 스미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대부인 하이에크에 따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주어지니 인센티브가 있다. 그래서 유인 기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까닭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멋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려는 속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의 정수입니다.

동굴에서 발견한 고대 수만 년 전 사람의 대퇴부 뼈를 분석하니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힐링이 된 흔적을 발견했죠. 다른 동물들은 대퇴부가 부러지면 끝이에요. 그냥 피식자가 되죠. 걷지를 못하니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혀 죽는데, 사람은 달라요. 대퇴부가 부러졌지만, 동료가 간호해주고 부축해 주고 먹이를 구해줬기에 나았을 거라고 추정하죠. 이처럼 대퇴부가 치유된 건 사람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경제가 약육강식의 정글 면모도 있지만, 온정적인 인간의 속성이 투영되는 측면도 있다. 흡혈박쥐처럼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본성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봐요. 권투 경기를 제외하면 스포츠 중계도 우리는 대체로 약자를 응원하거든요. 월드컵도 그렇잖아요.

강정면 본성일지 DNA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박재완 그렇죠. 내면의 그걸 끄집어내고 가꿔나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강정면 일반 시민 눈으로 보면, 공동체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는 기

본 가치가 되려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정 비율 자신의 시간과 돈을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지도층이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재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덕치(德治) 이게 좀 부족하죠. 법치(法治)는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금도지요. 예치(禮治)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저 사람이 밥을 한번 샀으면 내가 한번 사는 것처럼 ‘경우가 바르다’ 뭐 그런 셈이죠. 덕치(德治)는 이를테면, ‘그래도 내가 월급이 더 많으니까 밥은 늘 내가 사겠다’는 식이죠.

그런데, 우리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예치가 작동하는데, 범위를 넓히면 앞서 말한 공중목욕탕의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 전체로도 우리는 6.25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 아프간 파병하는데 전투부대는 안 된다, 공병부대만 보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세계 70여 나라가 전투부대를 파병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야박하다 할까, 커진 국력에 걸맞게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기꺼이 해야 합니다.

“민간 싱크탱크 토양 비옥해져야 숙의·공론의 장 열려”

강정면 한선재단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전파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박재완 한선재단은 특별히 재원이 있는 건 아니고 가난하지만,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아주 약소한 성금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한 일도 있습니다. 한선재단 같은 싱크 탱크가 사실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설득력도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싱크 탱크는 국책연구원 아니면 기업 산하 연구기관이 대종을 이루죠. 둘 다 중립성 차원에서 약간씩 문제가 있죠. 전자는 정부 정책을 합리화하기 쉽고 후자는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크죠. 노조 산하 연구

소도 그렇고, 시민단체의 연구소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아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싱크 탱크는 겨우 몇 개만 손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싱크 탱크의 토양이 좀 더 비옥해져야 숙의와 공론의 장이 펼쳐질 때 정파를 떠나 공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면 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박재완 교수가 주류를 이루죠. 퇴직 공직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일부 뜻있는 기업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회원들의 회비로 힘겹게 하루살이로 꾸려갑니다.

강정면 원래 박세일 교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였나요

박재완 1994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제가 재정경제원에서 파견을 나가 보좌관을 했지요. 이후 사회복지수석비서관으로 옮기셨을 때 저도 따라갔습니다. 박 수석께서 1995년 청불회(청와대 불자 모임)를 만드시고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2008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제11대 청불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경제 한동안 극심한 진통 겪을 수밖에 없다”

강정면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를 둘러싼 미국, EU 등 반러시아 그룹과 친러 그룹의 힘겨루기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현재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박 이사장께서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현 상황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요.

박재완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무척 높아요. 수출로 먹고사는데, 부존자원이 빈약하니까 수출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얹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부가가치를 내는 건 사람이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 철광석과 석탄을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해 강판을 만들어 자동차를 제조하는 거니까, 자연히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모두 높아서 대외 여건에 크게 휘둘리는 구조거든요.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과잉 유동성과 부채에 의존한 성장 경로를 따라 흥청망청했었죠. 미래의 자산까지 앞당겨 쓰면서 잘 지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을 마구 뿌려댄 후과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올라 서민이 더 힘들어지니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2년 정도의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해뒀던 씬씬이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와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미치고 있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심했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코로나 특수로 성과급까지 받는 회사원들까지 모두 지원금을 나눠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으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정부가 지출하도록 강제한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서 고삐가 풀려버린 재정을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온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읍소해야 할 텐데, 아직은 공기업들만 약간 쥐어짜고 있지만 재정의 확장 기조를 크게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인구배당'이 거의 희석되어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인구배당은 인구가 늘어나면 기술 진보나 정부의 통화 증발 등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리고 우리 경제의 뼈대는 제조업입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 전자 등 전부 제조업인데,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한 상황이라, 우리의 비교우위가 약화할 것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첫째, 고급인력 확보와 국민의 역량 향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은 대량생산형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일사불란한 일관 공정과 조립, 시키는 대로 오차 없이, 그리고 납기에 딱 맞춰서 필요하면 조금 더 앞당겨 완수하는 데에 강점을 지닙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은 아주 잘하지만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로봇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암기 위주로 배우고, 위에서 시키는 일은 잘하고, 선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교본에 있는 대로 잘하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건 잘하는데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것, 창조적 파괴라고 할 만한 그런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를 내지는 못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으면 돌파할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역량은 B학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대량생산에서는 통했고, 연공급 중심의 급여체계도 제조업에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해 서비스업과 융합한 다든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서비스업에선 B학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단순 제조업은 앞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가 다 장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A학점 인재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급여 시스템도 호봉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줘야지, '짬밥'을 기준으로 하는 건 낡은 유물입니다. 노사관계도 많이 바뀌어야 해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의미가 없어요. 제조업 공장 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야 하지만, 연구직이나 개발직을 비롯한 사무직은 훨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밤도 새고 그 다음 날은 사우나에서 폭 쉬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요.

우리도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니까,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아이들이 역량을 갖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나라 전체로도 국민의 역량이 향상돼야 합니다. B학점으로 국민 소득 10만 달러가 되기를 바라는 건 과욕이거나 요행을 바라는 셈이죠. 유대인이 그저 잘살게 된 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없는 국민이 잘사는 경우는 일부 자원 부국 빼고는 없습니다.

둘째, 정치권을 포함한 정부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모두 잘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가 막을 내린 공산국가의 계획경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큰 정부의 길로 들어섰던 영국, 이스라엘, 인도 등 일부 서방국가도 홍역을 치른 끝에 다시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해 회생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작은 규모의 경제에다 자원 빈국이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하기도 했죠. 철강산업은 조선과 자

동차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몸집이 커지고 민간의 역량도 비약적으로 확충됐죠. 정부보다 민간 기업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이 커서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자율, 창의와 활력이 위축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정감사 등에 부르면 참석해야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정가의 풍향계에 신경을 곤두세우죠. 온갖 발목을 잡는 입법과 규제도 많고, 거기에서 반기업 정서 때문에 국민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하는 등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 역량을 한껏 펼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에 비추어 기업이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선진국 표준에 걸맞게 철 지난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지으니까 그래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낮아지는데 국회에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력 집중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더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괜찮은 일자리를 잠식하죠. 누구를 위한 경제력 집중 규제인지 곰곰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말이 간 곳에는 소도 갈 수 있습니다”

강정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정치 외교 경제 등 대내외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재완 대외 정책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입지나 지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외교와 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는 자강(自強) 못지않게 문명국가와 동맹·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문명국가 소원해졌지요. 어떻게 보면 야만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기초가 새 정부에 들어서 바로잡아지고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재외동포나 유학생,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며 실력을 행사하는 일은 사실 자유주의에 어긋납니다. 전문용어로 ‘비지배 자유’(freedom of non-domination),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가 말살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밖에 대기업, 백화점, 대형 병원 입구에 가면 장기 주차한 차량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가로수마다 향의 리본을 잔뜩 어지럽게 붙여 놓은 사례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 법에 호소해야지,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인내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생떼’에 가까운 상황은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강조할 논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사관계가 어렵고, 정치 공학에 따라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격돌하는 이른바 ‘거부 민주주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비슷한 진통을 겪다가 지금과 같이 합리적인 상태로 진화했어요. 이웃 일본을 봐도 노동 운동이 1960~70년대에 아주 격렬했어요. 학생 운동도 ‘적군파’ 등을 비롯해 과격했는데 지금은 온건한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제가 1996년 대학에 몸담았을 때 우리 학생 운동도 굉장히 과격했었어요. 학생들이 본관 건물을 40일 동안 봉쇄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난리가 나기도 했죠. 지금은 우리 학생 운동도 합리적으로 싹 바뀌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주요 대학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학생회가 사실상 퇴출, 소멸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과정을 연구하면 우리 노사관계나 대결 정치도 정상적인 경로로 복귀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나 촉발 기제 등을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 게 지식인의 소명이죠. 그리되면 노동 운동이 영세 사업장, 취약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령으로 순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강정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와 2030 청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면.

박재완 저의 좌우명은 ‘마행처 우역거’(馬行處 牛易去)입니다. ‘(날렵한) 말이 간 곳에는 (느린) 소도 갈 수 있다’. 평범한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까지는 아니라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만큼 좋아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의 당부입니다.

강정면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감사합니다. ●